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52
----------	----

발의년월일 : 2006. 9.

발 의 자 : 박승희 의원의 14인

□ 제안이유

- 총연장 23.9km 경인고속도로는 서울과 인천 사이에 급증하는 수송 수요에 대비하여 1967. 3. 24 착공하여 1968. 12.21에 개통된 한국 최초의 고속도로인 바
- 1998년부터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된 통행료 폐지운동의 주된 사안은 출퇴근 시간대에 주차장을 방불케하는 극심한 교통 체증으로서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했으며,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30년 범위 안에서 통행료 수납을 정한다라는 조항을 통합채산제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측의 자의적인 요금 징수 결정에 대한 위법성에 대한 촉구를 제기하고자 하는 사안임.
- 1999년 12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의 개통으로 경인고속도로는 교통환경의 변화로 통행속도에 있어 그 기능 속도가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전무한 실정임.

□ 주요내용

- 지난 38년간 인천도심을 가로지르는 경인고속도로는 생활 중심권이 동서남북으로 양분되면서 재산권 침해와 소음, 배기가스 공해로 시달려 왔으며, 경인고속도로 이용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

-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한국최초의 고속도로로 개통되어 그간 약 38여년 동안 서울과 인천을 연계하는 주요한 교통의 중심축으로 기능을 수행하여 왔음
- 그간 경인고속도로는 약 38여년간 유료로 운영되어 투자비의 약 307%에 해당하는 금액인 7,769억원을 회수하여 도로건설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국가기반시설 확충에 일조하여 왔음
- 그러나 최근 주변여건의 변동으로 고속도로의 기능은 상실되었고, 장기간 유료화에 따른 문제점 및 무료이용자와의 형평성문제등 유료화에 따른 시민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음
- 이에 우리의회는 265만 시민의 뜻을 모아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변칙적인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를 철회하라

도로의 통행료는 유료도로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30년의 범위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건설교통부 및 도로공사 측에서는 도로의 종류가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법 시행이전 결정된 통행료라는 이유로 총 68년 동안 통행료를 징수코자 하고 있는바, 이는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2. 투자비의 307%회수한 고속도로 통행료는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는 현재 투자비의 307%인 7,769억원을 회수하였는바 더 이상의 통행료 징수는 인천시민을 우롱하는 정책으로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3. 형평에 맞지 않은 통행료 정책은 개선되어야 한다.

그간 부천, 김포, 시흥 등의 시민들은 무료통행하고 38여년간 인천시민만 통행료를 납부한 기형적인 통행료 정책은 즉시 개선되어야 한다.

2006. 9.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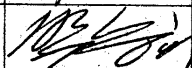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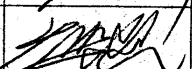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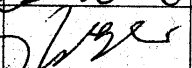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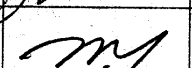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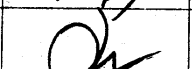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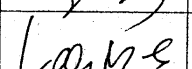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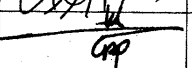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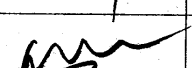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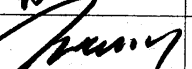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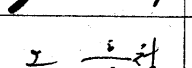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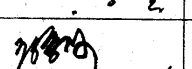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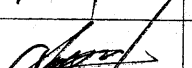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요금징수 제도는 같은 고속도로 통행 이용자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요금제도로 인해 부천, 김포, 시흥 등의 인접 시민들은 무료통행인 반면, 인천의 서구, 남구, 동구, 부평구, 계양구 주민들은 인천 톨게이트에서 꼼짝없이 통행료를 지불한 금액 대비 회수율 307.6%에 7,769억원을 회수하여 이미 개통 10여년만에 투자비를 회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인고속도로의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회수완료 노선에 대한 요금인하 및 재투자계획이 전무한 상태에서 통합채산제라는 명목으로 신설 고속도로 비용을 경인고속도로 이용 시민에게서 징수한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임. 아울러 이제 경인고속도로는 인천시민의 품으로 되돌려 주어야 하며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요금징수는 즉시 폐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관계 당국에서는 면밀한 검토를 하여 주기를 바랍.

붙임 : 서명날인부 1부.

의원서명날인부

의안명 :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 및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일련 번호	의원명	서명	일련 번호	의원명	서명
1	지정구		16		
2	곽승희		17		
3	윤희철		18		
4	김복근		19		
5	최보경		20		
6	이근하		21		
7	신영리		22		
8	이영호		23		
9	박희경		24		
10	서영은		25		
11	김용재		26		
12	오흥환	오흥환	27		
13	김종섭		28		
14	조승희		29		
15	이상환		30		